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촉구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 한목소리로

지난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 사회복지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된 전면개정안을 다시 특정단체의 반대를 이

지난 9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가족정책기본법」을 의결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할 때부터 전통적인 가족유형을 건강한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건강 가족’ 또는 ‘문제있는 가족’으로 낙인찍는가하면, 건강가정 지원사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는 등 사회복지계,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사회복지계와 여성계가 끊임없는 법 개정활동을 벌인 가운데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겨진 상태이다. 하지만 특정단체 등의 반대이유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으로 현재 계류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11월 30일 오전 10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는 이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가족정책기본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가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11월 24일 대체토론까지 하였지만 반대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법 제정 당시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여성·사회복지계는 변화된 가족현실을 반영하여 가족구성원 누구나 가족정

책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된 전면개정안을 다시 특정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정책사안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점과 새로운 가족정책 수립에 대한 법사위 의원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는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의 기본틀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 사회복지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전국 396개 복지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국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경기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3개 회원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개 회원단체), 부산여성단체연합(5개 회원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7개지회),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 9개지부), 한국여성민우회(전국 11개 지역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국 25개지부 1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 7개지부 2개 회원단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